

DLF사태 소비자보호 해법은?

미스터리쇼핑 강화... 판매사 펀드리콜제 확대

(암행감찰)

노조 “정책실패가 사태 확산시켜 금융산업, 전업주의로 전환해야”

윤석현 “실효성 높이게 개편할 것”

시중은행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DLS·DLF)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상품 판매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미스터리 쇼핑’이나 ‘펀드리콜제’를 강화·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을 통해 은행의 DLF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키코(KIKO) 사태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음에도, 여전히 은행에서는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를 제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사태를 확산시켰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부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의 겸업주의 정책을 전업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회의원도 시중은행의 DLF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나온 한 DLF 피해자의 경우 해당

상품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인줄 알고 있었고, 은행이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했다”며 “고객의 신뢰를 먹고 사는 은행이기에, 고위험 상품을 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파생결합상품의 은행 판매는 유지하되,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

리도 나왔다. 현재 도입된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거나, 일부 증권사에서 시행중인 펀드리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법이 그 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키코에서 파생결합상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스터리쇼핑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이후에도 동양증권 기업어음(CP)사건에 이어 ETF, ELS 관련 분쟁이 이어졌다”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가 재발했다는 것은 조사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물론, 사후 조치 또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적인 저성장·저금리 기조 흐름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결합상품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리콜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며 “금융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이후 만기 배리어, 기초자산 등 상품의 구체적 정보와 더불어 고객에게 리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가 리콜을 신청하면 투자원금을 판매회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포함해 돌려주는 형식이다. 현재는 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 등 4곳이 펀드 이외 대상상품 등을 확대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에 용역 직원을 사용하면 검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미스터리쇼핑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편하겠으며, 오늘 논의된 여러 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롯데월드, 어드벤처 파크 5G망 개통

롯데월드 대표 캐릭터 로티, 로리와 모델들이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파크 내 5G망 개통 양료를 축하하고 있다. 오는 10일 부터 최대 3만명이 동시 접속하더라도 끊김 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월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 흑자 폭 줄어

통합재정수지 흑자 9.6조원 기록 전년비 3.1조 ↓... 2년연속 감소세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비율로 따지보면 2015년 5.73%에서 2016년 5.52%, 2017년 5.03%, 2018년 3.55%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017년 7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7.16%에서 5.43%로 1.73%포인트 감소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둔화된 탓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8.23%(23조5000억원)에서 1.39%(23조8000억원)으로, 지방소비세는 13.63%(7조3000억원)에서 2.59%(7조5000억원)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다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97.69%에서 97.8%로 0.11%포인트 높아졌다.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은 2.81%에서 2.49%로 0.32%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재정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흑자 폭은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12조7000억원보다는 3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12조6000억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12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고선

/석대성 기자

韓 국가경쟁력 13위... 기업·노동은 하락

세계경제포럼, 141개국 평가

거시경제 안정성, ICT보급 세계 1위 싱가포르 1위, 美 2위, 홍콩 3위 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 순위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주저앉았다. 이외에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보다는 뒤지지만, 한국은 국가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였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12개 평가 부문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다섯 부문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다섯개였다.

우선 노동시장 순위가 올해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이주열 “올 2.2%달성 쉽지 않아 보여”

>> 1면 ‘D공포 차단 나선...’서 계속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간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준금리는 최저점인 연 1.25%였다.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 한은 ‘실기론’ 등장... ‘나빠질지 몰랐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은의 ‘실기론’도 등장했다. 지난해 말 경기 하강기에 금리를 올려 정책적 판단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경기 하강국면에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지난해 인상할 땐 경제가 이렇게 나쁘리라고는 생각 안 한 게 사실”이라며 “경기

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2.2%)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올해 2.2% 성장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희주 기자 hj89@